

특집

# 금융부문의 Y2K 해결 추진현황과 전망

합 찬 호<sup>†</sup>

◆ 목 차 ◆

- |          |           |
|----------|-----------|
| 1 서 론    | 4 해결 추진현황 |
| 2 대응추진경과 | 5 향후 추진계획 |
| 3 주요조치사항 | 6 결 론     |

## 1. 서 론

컴퓨터 시스템의 Y2K는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정보화가 일찍 시작되어 개별기관의 내부 컴퓨터 시스템, 외부기관 및 고객과의 네트워크 등 시스템의 규모와 범위가 방대하여 시스템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 있고 업무수행의 특성상 날짜와 관련된 정보처리가 핵심을 이루고 있어 Y2K의 영향이 그 어느 부문 보다도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Y2K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00년이 도래했을 때 이자계산 오류, 자금이체 착오, 신용카드 사용불능 등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가 마비될 뿐만 아니라 CD/ATM 및 타행환시스템과 같은 금융공동망에도 연쇄적인 장애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사태가 유발되는 등 금융거래 및 결제시스템에 막대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금융정보시스템은 전세계의 금융기관들과도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Y2K로 인해 어느 한 나라의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영향이 외환 및 유가증권결제시스템, 신용카드시스템 등과 같은 국제적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순식간에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에도 파급되어 전세계의 금융시장이 크게 교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들은 금융시장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해 Y2K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함과 아울러 금융감독기능을 통하여 각 금융기관의 대응계획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비교적 일찍부터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가장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95년말부터 고위책임자가 이끄는 CDC(Century Date Change)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기관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대응계획의 수립 및 실행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60일마다 연준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일본은행도 Y2K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각 금융기관 및 관련업계에 대하여 Y2K 해결을 위한 시스템 변경 등 대응계획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97년 7월 이와 관련된 중점검사항목을 공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sup>†</sup> 정회원 · 한국은행 금융결제부(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전자금융과장

## 2. 대응추진경과

우리 나라의 경우 '96년초부터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대응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한 가운데 '97년 2월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앞으로 금융공동망과 관련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한국은행 내부적으로도 온라인시스템의 재개발, BOK-Wire용 전산기기 교체 및 응용프로그램의 수정을 추진하는 한편, 각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Y2K의 영향을 조속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러나 '97년 8월 은행·증권·보험·종합금융 등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Y2K에 대한 대응현황 및 계획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Y2K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계획도 미흡하였다.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거나 이미 핵심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Y2K의 상당부분이 해결된 경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Y2K의 심각성에 대해 최고경영자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많이 있었다. 특히 증권·보험·종합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은행금융기관에 비해 최고경영층의 인식수준 및 대응계획의 마련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이미 수립된 대응계획에 있어서도 그 실행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Y2K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나, 외부기관과의 접속테스트 및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도 1998년 12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이 자체시스템의 수정을 완료하고 1999년 상반기중 외부기관과의 접속 테스트를 실시하여 2000년 도래

이전에 모든 문제점을 해결토록 권고한 바 있었으나, 당시 우리 나라의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자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99년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등 테스트 및 검증에 따라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권고되고 있는 대응완료일정에 크게 미흡한 것이었다.

셋째,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공동해결 노력이 부족하였다. 은행권은 개별은행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공동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으나, 증권·보험·종합금융 등 제2금융권은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인 추진체계의 부재 등 공동대처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권 및 보험정보망은 물론 현재 자체 공동망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도 개별기관별로 전산시스템의 대응준비를 마친 후 기관간 상호 연결되는 부분의 테스트 등을 거쳐 공동망이 문제없이 운영될 것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외부기관과의 공동테스트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Y2K의 해결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응계획이 자체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테스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외부기관과 접속된 시스템에 대한 공동테스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Y2K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분적인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한국은행은 '97. 10월 금융부문의 Y2K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98. 4월 정부가 금융부문을 국가차원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후부터는 당행이 금융부문 전체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8. 10월 한국은행 과과 금융감독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등에 의거 한국은행은 지급결제분야의 대응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및 평가업무를 금융감독기관이 담당하는 등 역할을 업무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 3. 주요조치사항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96년 초부터 개별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나 전체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에 의거 각 금융기관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음에 따라 한국은행은 '97. 10월부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해 왔다.

첫째, 'Y2K에 대한 금융기관 대응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대응지침에서는 Y2K의 해결과 관련한 추진단계별 이행완료 목표기한(target date)을 설정하고 있다. 즉, 1997년말까지 각 금융기관이 대응방안을 평가하여 자체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8년 12월말까지 내부 전산시스템의 수정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1999년 6월말까지 외부 접속기관과의 연결테스트를 끝마침으로써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Y2K의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의 평가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거 시스템 수정 및 테스트작업을 진행해 왔다. 일부 금융기관은 과거 신시스템을 개발하면서 Y2K를 감안한 관례로 전반적인 재점검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하였으며, 시스템의 재구축 등에 따라 내부 전산시스템중 특정부분의 Y2K를 이미 해결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금융공동망의 경우에도 금융결제원 및 각 참가기관간의

공동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동 지침에서는 △조직내부의 인식 제고 및 해결전략의 수립 △대응방안의 평가 및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전산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등)의 변경실행 △내부테스트 및 외부기관과의 연결테스트를 통한 무결성 검증 △신시스템으로의 완벽한 이행 등 Y2K의 해결과정에서 각 금융기관이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Check list)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립된 각 금융기관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분기별 이행상황보고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간 Y2K에 관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Y2K 담당책임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영향평가 및 대응활동과정에서 습득한 각 금융기관의 경험과 Know-how 등 각종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각 금융기관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금융공동망, BOK-Wire, 디고잭전산망 등 외부기관과 접속된 시스템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스템운영주체가 변경예정사항을 최소 3개월전까지 상대기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당시에는 국내·외 컴퓨터업체들이 Y2K를 새로운 사업기회의 확대 또는 수익증대의 호기로 인식하여 사용자들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거액의 컨설팅 비용과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교체를 강요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많았다. 이에 따라 동 실무책임자 회의에서는 동일한 컴퓨터기종을 사용하는 금융기관의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는 같은 유형의 Y2K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용자그룹별로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공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벤더와 일괄 교섭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정보등록번호,

무역자동화업무코드 등 금융기관의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금융부문의 연도표시코드 등을 조사하여 관련기관앞으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등 금융기관간 정보교환체제의 가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금융기관 대응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의 대응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감독기관과 공조하여 금융기관 대응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중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및 권고활동을 강화하였다. 특히 은행장회의 등을 통해 대응작업에 우선적으로 인적 및 물적자원을 지원토록 하는 등 경영층의 인식을 제고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권고하였으며, 금융공동망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간 공동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였다.

넷째, 철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Y2K에 따른 비상계획 수립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98. 12월 금융기관의 비상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비상계획 표준안을 작성하여 보급하였다. 동 비상계획 표준안은 자체 컴퓨터시스템 문제나 여타 금융기관 및 전기·통신 등 외부기관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은행영업이 곤란한 상황하에서도 금융기관이 컴퓨터시스템을 조속히 복구하거나 수작업으로 핵심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행동계획으로 활용되도록 제시되었다. 비상계획 표준안은 크게 작성 세부지침(guideline)과 구체적 예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성 세부지침에는 비상계획 수립 추진절차를 착수→초안작성→계획확정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업무처리방법과 비상계획 최종안 수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거래관련 중요 사항(대고객 홍보, 자금포지션 관리, 법적분쟁에 대비한 준비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한 금융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5개 영업부문(수신, 여신, 자금, 외환, 신탁)과 전산 및 비전산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표준안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경우 Y2K 발생시에도 핵심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결과가 되어 우리 나라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완벽한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해결과정 및 비상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나 감리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다섯째, 민간부문의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Y2K 대응상황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 반영토록 지도하였고, 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Y2K 대응상황을 포함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Y2K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보험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하여 금융부문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도모하였다. 즉, 미연준 등 외국중앙은행, BIS 「Y2K 합동위원회」, 「Global Year 2000 Summit」, EMEAP, SEACEN 등과 직접 교류하거나 국제회의 등에 참석하여 금융부문의 대응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의견교환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bok.or.kr)를 운영하고 있다.

#### 4. 해결추진현황

각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과 감독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여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빠른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응진척도를 보면, 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금융기관은 '98. 12월말 현재 대응완료비율이

국내은행 99.2%, 증권 96.3%, 보험 97.6%에 달하는 등 대부분 고유업무와 관련된 핵심시스템에 대한 변환 및 자체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금융권역별로 모든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종합 연계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미완료부분은 대부분 문제발생시의 영향이 미미한 내부경영관리 시스템과 출입자관리시스템 등의 비전산부문에 해당되고 있어,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목표기한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종합금융 등 기타 금융기관은 '98. 12월말 현재 금융기관 그룹별로 총 보유 자원의 87.1%~99.4%에 대해 대응을 완료하였다. 상호신용금고 등의 진척도가 은행 등에 비해 다소 저조하나 이들 기관의 경우 보유시스템의 규모가 작아 2000년 도래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금융권역별 대응완료비율(%)

구 분	'98. 12월말
국내은행 및 금융결제원 (26개)	99.2
외국은행 국내지점 (50개)	92.3
증권사 및 증권유관기관 (62개)	96.3
보험사 및 보험유관기관 (49개)	97.6
종합 금융사 (13개)	99.4
리 스 회 사 (17개)	94.6
신 용 카 드 회 사 (7개)	95.7
할 부 금 융 사 (24개)	97.6
신 기 술 금 융 사 (4개)	99.1
상 호 신 용 금 고 (207개)	87.1

둘째, '98년중 실시한 금융기관의 외부연계테스트 현황을 살펴보면, CD·타행환·지방은행·ARS공동망, 경찰망, 무역망, 일괄전송시스템 등은 은행공동망에 대해 '98. 7월~'99. 2월중 전 은행과 금융결제원간 개별적인 연계테스트를 완료하였으며, 신용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해서도 '98. 9월 이후 각 참가기관과 은행연합회간 연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자금융증개주의 콜거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98. 8월 ~12월중 증권전

산, 로이더 등 6개 기관과 자금융증(주)간의 연계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셋째,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의 Y2K로 인한 리스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의 대응실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기업신용평가 등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98. 12월말 현재 25개 국내 은행중 22개 은행이 10억원 이상의 여신거래 기업 10,059개에 대해 평가한 결과 38%인 3,820개 기업이 중위험 이상으로 평가되어 여신거래시 문제해결을 약속하는 추가약정서 제출, 신용평점 하락, 대출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거래기업의 대응실태 평가결과 위험등급별 기업체수 (단위: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합 계
2,368 (23.5%)	1,452 (14.4%)	6,239 (62.1%)	10,059 (100.0%)

\* 은행공동 표준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은 고위험, 70~80점 미만 중위험, 80점 이상은 저위험으로 분류

넷째, Y2K로 인한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개별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비상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비상계획 표준안」을 참고로 자체 실정에 맞는 비상계획을 '99. 6월말까지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

### 5. 향후추진계획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은행·증권·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은 대부분 자체 시스템의 수정(교체) 및 테스트를 완료하고 종합 연계테스트를 준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목표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1999. 6월말 이전에 문제 해결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소형 금융기관도 은행 등에 비해 추진실적은 저조

하나, 보유시스템의 규모가 작아 이들 금년중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금융부문은 Y2K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산장에 발생 가능성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신거래기업의 채무불이행, 법률분쟁에 따른 금융기관 경영의 불안정성 그리고 고객의 현금인출 등 경영상의 불안요인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각종 관련 리스크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모든 금융기관이 목표기한내 대응을 완료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9. 3월말까지 대응 미완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분기별 보고 체제를 월별 보고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기관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모든 전산자원에 대한 기한내 대응 및 비상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등 대응 미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응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응단계별로 자체 감사실 직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자체감사 기능도 크게 강화토록 하고 있다.

둘째, 은행, 증권 및 보험 3개 금융권별로 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테스트를 '99년 상반기중 수차례 실시하여 금융부문의 문제해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종합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금융시스템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99. 6월에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과 S.W.I.F.T 등이 동시에 참여하여 실시하는 Global Payment Systems Test에도 참가하는 등 국제적인 연계테스트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높일 예정으로 있다.

셋째, 비상대응체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 금융기관이 외부기관과의 종합적인 연계테스트 및 비상계획의 수립을 완료하는 대로 '99년 하반기중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비상대응체제를 점검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융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융부문 전체상황을 총괄관리하는 비상대응조직을 '99년 하반기중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Y2K로 인한 금융기관의 각종 리스크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신거래기업의 Y2K 대응상황을 여신심사에 철저히 반영하여 당해 기업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금융기관 상무회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Y2K로 인한 금융기관과 고객사이에 금융분쟁이 최소

금융권별 종합테스트 계획

구 분	은 행	증 권	보 험
시 기	3. 21(일) 및 4. 18(일)	4. 7(수)~9(금) 및 4. 14(수)~16(금)	3.1~4.30(토, 일) 및 6월중(미정)
참여기관	은행, 신용카드사 및 금융결제원 등	증권사, 증권전산 및 증권거래소 등	손해보험사 및 보험개발원 등
대상시스템	CD, ATM 등 은행공동망, 어음지로, 어음교환 및 외화 자금중개*	신공동온라인,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관리, 주식채권 매매체결, 코스닥 매매체결, 선물 옵션 및 증권 종합 정보	보험계약조회, 사고 경력조회 등 공동 정보시스템
주관기관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보험개발원

\* 외화자금중개시스템은 '99. 3. 6(토) 실시 완료

화되도록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각종 계약서, 약관 등을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강구토록 권고하는 한편, 금융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존의 금융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고객의 과도한 반응(불필요한 예금인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99년 3/4 분기중 「금융기관 고객 행동요령」을 제정 보급하여 고객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2000년 도래 이전에 통장정리, 거래기록 보관 등을 권고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발생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각종 국제기구나 외국 중앙은행과의 정보 교류 및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관련 정부부처 및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국내 금융부문의 추진실적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 안내책자의 청구비치, 수신자 요금부담 안내 전화 등 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토록 지도하고 자체 금융기관의 대응실태(해결진척도)를 스스로 공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종합적인 대응 지침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여타 부문에 비해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행된다면 금융부문의 Y2K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금융기관들도 있음을 감안할 때 금융부문의 경우에도 낙관적인 전망만은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독일의 종합금융그룹인 「도이치 모건 그렌펠」은 Y2K가 국제적 불황을 야기시킬 확률이 최소한 35%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가트너그룹」도 전세계적으로 Y2K 해결에 실패할 확률을 3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금융당국은 아시아지역의 금융기관들이 Y2K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Y2K를 해결하지 못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도 Y2K 해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의 존재를 결정할 수도 있는 Y2K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IMF체제의 극복과 함께 우리앞에 놓여진 중대한 과제이다.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Y2K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급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경영층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당장 나서서 직접 챙겨야 한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성공확률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의 문제해결 노력에 대해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는 일도 필수적이다. 모쪼록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희망과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는 금세기 최후의 숙제인 Y2K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 함 찬 호



- 1979년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1993년 서울대학교 고급금융과정 수료
- 1979년 한국은행 여신관리국, 기획부, 외환관리부, 금융결제부

1999년 금융결제부(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사무국) 전자금융과장  
 관심분야 : 금융정보화 추진, 전자화폐 도입, 금융정보망 안전대책